820조 예산 심사 돌입…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여야 격돌

초과세수로 미래대응기금 편성
與 "성장동력 확보 위한 필수 투자"
野, 문제사업 30조 지출 삭감 추진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4주 간의 국정감사를 마치고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편성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지난달 30일 예산안 심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고 국회는 2일엔 정부 측 시정 연설을 청취한다. 이후 예결특위에서 4~5일에 부처 수장들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며 그 다음주부터 경제·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오는 12월2일까지인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간극이 가장 큰 지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이재명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18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황기에 세수 증가분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수가 줄어드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이 '재정안정화 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에 지적에 정부는 "증가한 세수로 모두 국채를 상환할 경우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성장을 통해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성장주도형 재정건전화'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 몫으로 편성된 예산을 심사 과정에서 지켜 성장과 투자에 적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기금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로 대한민국은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 한다"며 "반도체와 AI(인공지능),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같은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미래 성장을 이끌 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지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주도 성장 예산도 두 배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묻지마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연구 현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난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 1520조원이 된다"면서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원이 쌓인다.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고무도장이 아니라 곳간지기가 되겠다. 초과세수는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 곳간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가 낸 빚을 우리 아이들이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은 그 곳간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을 전액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오는 3일 ▲일자리 문제 ▲소득과 생계 ▲돌봄 ▲국민안전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5대 해결 예산'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당, 정청래 재등판·신천지 논란에 긴장

정청래, 김민석 100일 평가 예고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 공개 예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번주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의 신천지 교인 '민주당 당원 집단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보고 받는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여, 계파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8·17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벌인 정청래 전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00일이 '정치적 평가의 시점'이라고 표현하며 김민석 지도부 비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전날(10월31일) 유튜브 '박시영TV'의 '정치수련회'에 출연해 당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전당대회 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외에 전면에 나서는 정치적 행동을 자제해 왔다.

정 전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취임 100일 내 정당 지지율 10%포인트(p) 상승' 공약에 대한 질문에 "100일 정도 되면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본다. 성과, 지지율, 여러가지 평 이런 것들이"라며 "그 이후에 저의 역할은 무엇일지, 그리고 제가 기치를 내걸 것은 무엇인지, 그때 어떤 깃발을 들 건지, 그 깃발에 어떤 글씨를 쓸 건지 지금 하나하나 생각하고 글을 써 놓고 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김 대표 취임 100일은 11월24일이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전당대회 직전인 지난 8월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5%였다. 민주당은 연령층별 조사에서 18~29세와 70대 이상 연령층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을 앞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달 27~29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로 오히려 양당 사이 격차가 좁혀졌다. 민주당은 연령층별 조사에서 18~29세,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에 뒤쳐지며 김민석 지도부 출범 후 오히려 지지도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다.

정치권은 정 전 대표가 이러한 지지도 흐름을 공략하며 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가 당 대표 직속 '대통합추진단'에서 논의하고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작업을 적어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과는 수십 년을 함께 살고 3년간 헤어져 산 것"이라며 "같은 뿌리이고 같은 집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임박해서는 불가능하다"며 "원래 제가 합당 제안 선언을 했을 때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것이 대체적인 합의였다.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가 지났으니 빨리 움직여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 와중에 민주당은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 전에 박선원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아 조사한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 '민주당 당원 집단가입 의혹' 조사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전후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반명(反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친청(친정청래)계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조사 결과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의원총회에서 TF 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만큼, 조사의 신뢰성과 추후 수사 의뢰 여부를 두고 계파 간 설전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법을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로 실시됐다. 8월11~13일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p), 응답률은 9.7%다. 10월 27~29일 조사는 같은 방법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0.4%다.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李, 오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예산 기조 설명·국회 협조 요청할 듯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취임 후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6월(추가경정예산안), 지난해 11월(2026년도 본예산안), 올해 4월(추경안) 등 취임 후 3차례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안정,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위한 재정 투자 등이 담겼다. 특히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예진 기자 syj@

민주당, 조희대 국조 앞두고 계엄 재소환

계엄 동조 의혹에 초점
성과 없으면 역풍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국정조사를 놓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역풍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우려 중 가장 상징성 있는 '계엄'을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내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국정조사 대상은 ▲대선 직전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대응 ▲대법관 재제청 ▲업무추진비 집행·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씨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 모두에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국정조사에서는 '계엄 동조'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하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이 이뤄질지, 국정조사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국정조사 이후에도 탄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열었다는 비판만 받으며 역풍이 일 수 있다.

/서예진 기자